도의회 광장

2021 03 제71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3회 임시회

03 5분 발언

04/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2 사무처 소식

봄이오다 **바다를 품다** 물질을 나가는 해녀의 모습에서 강인한 제주의 힘이 느껴진다. 제주의 바다는 겨울에서 벗어나 옷을 갈아 입고 제주의 어머니들은 새봄을 캐기 위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의회 차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가 3월 17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임시회 자동폐회 이후 2주만에 열리는 것으로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여파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도의회 의원은 물론 의회 공직자 모두 도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 전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외부 투기세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문제 등 60여 개 안건을 다뤘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다. 도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희룡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개회사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신의 져버렸다”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가 3월 17일 개회된 가운데, 좌남수 의장이 제2공항 사업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신의를 저버린 처사이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도지사의 개인적인 미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일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데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문제의 실타래를 풀고자 했던 수많은 논의와 토론, 협의 과정 노력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좌 의장은 “당정협의, 도의회, 반대단체까지 순간마다 고비를 넘으며 여론조사까지 오는 데도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지사는)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 없이 도지사로서 소신과 책임이라며 일반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입장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도의회와의 약속을 외면해 신의를 저버린 처사였다.”며, “또 다시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 속으로 치달아서도 안 되며, 그 피해가 도민에게 전가돼서도 안 된다.”라면서 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여론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 정책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을, 다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민사회 갈등을 증폭시킨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향후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쏟는 관심과 지원에 비해 오죽하면 ‘제주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평화의 섬 제주가 갈등의 섬이 되지 않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좌 의장은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여파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도의회 의원은 물론 의회 공직자 모두 도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 전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외부 투기 세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문

제2공항 입장 발표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 있나

홍명환 의원, 긴급 현안질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3월 17일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홍 의원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이후 후속 절차를 고민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원 지사의 입장 발표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원 지사는 성산 주민 찬성이 높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 3개 마을은 반대가 높아 주민 수용성 확보 주장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최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것 같다.”며, “왜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다시 묻는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크다.”.

이어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했고, 법률상으로 최종 절차 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답변을 보낸 것”이라며, “피해 마을 5개 중 2개 마을은 찬성이 높다. 반대가 높은 마을만 꼬집어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ADPi 권고안 중 제주공항 수용력 확보에 핵심적인 과제 5개 중 1개밖에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현 공항 확장으로도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대안이 없다. 만약 된다는 대안이 있으면 제2공항을 무산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을 대통령이 약속하라.”며, “대통령이 가덕도도 가지 않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대표발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추진됐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17일 개회한 제393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 결과에 불복,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얀마 내 유혈사태 중단 및 구금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등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는 4·3의 아픈 기억을 오랫동안 치유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도민 사회 및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속한 중단과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표발의 한 현길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영식 의원, 이상봉의원, 김용범 의원, 정민구 의원, 문경운 의원, 강성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경미 의원, 김태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5분 발언

“제2공항 갈등종식은 조기추진”

이경용 의원

이경용 의원(사진·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3월 17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실시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해석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나타난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고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지지했다.

이경용 의원은 “제주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중에도 제2공항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2공항을 두고 동부와 서부가 나뉘고, 산북과 산남이 나뉘고 있는 이런 소모적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2공항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착실하고 투명하게 법적절차를 차근차근 모두 밟아왔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다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제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제2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소외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원 도정, 환경수용성 갖추고 제주 미래 이야기하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 “환경수용성을 우선 스스로 갖춘 이후 제주 미래에 대해 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환경을 방치한 원희룡 도정’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환경 관련 정책들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매순간 느껴왔고, 도정에게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예산·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들어야했다”며 “원희룡 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8억짜리 제주미래비전용역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으로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들은 다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환경자원총량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및 국가정원 확대지정, 송악산 선언까지 무엇하나 구체적 실천도 성과도 없는 말뿐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건설공사로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환경수용성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제주 위해 제2공항 적극 추진해야

강충룡 의원

강충룡 의원(사진·국민의힘·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17일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라는 원 지사의 입장과 도민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한 게 뭐가 문제냐.”며, “미래 제주를 위해 5조 원 넘는 경제유발 효과와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 2,000명, 그리고 성산 지역주민 500명에게 실시했다.”며, “이것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정책 참고용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토부에 묻겠다.”며, “그동안 제2공항 추진에 절차적 투명성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며, 성산포 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제는 국토부에서 답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 역시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해 왔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다시 물어왔고, 다시 일관된 입장을 전달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민 뜻 모아진 밥상에 악의적으로 재를 뿌리는 것”

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7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문제는 아무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어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제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도의회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갈등해소 특위가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갈등해소 특위’의 운영 방식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최종 마무리를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도민의 뜻을 알아보자고 한 것은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의미 없는 허명의 문서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도민 뜻이 모아진 밥상에 악의적으로 재를 뿌리는 것이고,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치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도의회 내의 일원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함께 해 놓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돌변하는 모습은 자기 모순이며, 비겁한 일로 동료 의원과 의장 특히 도민들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3특별위원회

“4·3생존 수형인·행불인 무죄 판결,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연동 을)과 위원들은 3월 17일 성명을 내고 “70여년전 아무런 죄명도 모른 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생사 소식이 끊긴 4·3행불인과 그 날의 기억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신 생존수형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순원 할아버지 등 13명에 대한 재심에서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생존수형인 및 행방불명 수형인을 포함한 335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장찬수 부장판사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70여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연좌제와 불명예로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4·3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랬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 않고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위로했다.

4·3특위는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으로 제주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이날 무죄 판결로 유족들은 70여 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 외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과 여건이 안 되어 재심 절차를 못 받는 분들이 2000여분이 계신다.”고 상기시켰다.

4·3특위는 “다행히 지난 2월 26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일괄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리고 본회의 의결 후 18일 만인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재난수습

강성민 위원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 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난수습 지원에 있어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고,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3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박호형 의원,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호형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일도이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예술인 창작환경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안정적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예술창작 활동의 난맥상을 최소화하고 예술인들의 입지에 맞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표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 손실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이슈

사무처 의정자료센터 운영결과 보고

의회 운영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일정 하루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3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로부터 지난해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의회 공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수장고 보관 도서 1만권이 폐기된 사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의회 공간 리모델링으로 수장고와 의정자료센터가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수장고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공기청정기 비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분석해서 수장고 자료 보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장비가 더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3일까지였던 제393회 임시회 일정을 오는 24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이는 지난 392회 임시회 안건이 도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다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형 뉴딜' 본격 추진 … 의회 공동 논의

올해 제주형 뉴딜 추진 방향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기 제주 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TF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주형 뉴딜 발표 후 공모사업 선정 결과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제주형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제주형 뉴딜은 CFI2030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그린뉴딜 선도지역'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44개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019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752억원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제주 수소경제의 기반이 될 그린수소 P2G 생산실증 △최적화 동선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디지털 기술기반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MEC 기반 5G 비대면헬스케어 등 19개 사업·271억원(국비 238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올해는 △자율주행 기반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748억원(국비 514억원) 규모의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 한 해 지속해서 공모사업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와 의회는 제주형 뉴딜 과제 발굴과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 정부 동향 파악,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핵심 대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제주형 뉴딜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편, 기후위기 등에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도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뉴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보고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신축현장 방문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오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사업계획도 담는다.

그러나 앞서 2003년 제1차 계획부터 2017년 제2차 수정계획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실제 투자는 미흡해 3차 종합계획 역시 허울뿐인 비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3차 종합계획도 장밋빛 계획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계획대비 투자 비율을 보면 1차 계획은 26%, 1차 보완계획 67%, 2차 계획은 3%, 2차 수정계획 17.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임 기간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들은 3차 계획안의 핵심사업 선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9일 공유재산 관련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현장과 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월 18일 제39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인프라가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3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과 관련, 전동 보장구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며 "단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택시 등이 몇 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중장기계획에 담긴 조사가 전부 표본조사가이기 때문에 제주도 대상자가 얼마나 들어갈 지 모르겠다"며 "도 관련 부서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니즈가 정작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조차 공감이 안되는데, 당사자들은 더더욱 공감이 안될거라고 본다"며 "이것을 어떻게 향후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보완할 수준이 아니라 폐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동권 부분에 대해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있고, 저상버스 비율도 전국적으로 보면 수준이 높다"며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13명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로 일부 소통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위원장 양영식 의원)는 3월 23일 제393회 임시회 2차 심의에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두 조직을 총괄 지휘·감독할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요구권, 자치경찰 규칙 사무제·개정, 소관 사건·사고 현안 점검, 국가 비상사태 시 임무 수행 등의 막강한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는 7월 자치경찰 출범을 위해 이번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수립해 지난달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 조례안은 제주도자치경찰위가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할 경우 제주경찰청장 의견청취 절차를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뒀고, 제주경찰청은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자치경찰위 산하에 실무협의회만 두겠다는 계획이며, 제주경찰청은 도지사·제주청장·자치경찰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후 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 유충 재발 사태, 근본 대책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의원)는 3월 22일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본부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정수처리시설 보완도 필요하지만,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는 취수탑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좀 더 세밀한 정수처리 과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취수원 보호 차원에서 강정천 주변 사유지를 행정이 매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이 길다"며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취수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제주지역 상수도 관련 시설이 너무 낡았다"라며 "시설 교체가 필요한데도 사고가 나면 임시로 보수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보니 도민들이 불안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삼다수를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지만 행정은 하수슬러지 발생 증가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정이 하수슬러지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9일 서귀포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강정정수장 운영이 한동안 중단된 이후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가정집에서 유충이 다시 발견됐다.

상하수도본부장, 환경국장 잦은 교체로 정책 난항

강성의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3월 22일 회의에서 상하수도본부장과 환경국장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환경과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서장(국장) 배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하수도본부의 경우 원 지사가 취임한 2014년 7월 당시 문원일 본부장을 시작으로 현재 안우진 본부장까지 9명이 본부장 직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13대 문 본부장과 15대 홍성택 본부장, 17대 강창석 본부장의 경우 각각 1년6개월씩 본부장직을 수행했지만, 나머지 본부장들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임기만 수행한 뒤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환경보전국장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16년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양보 부이사관이 약 3년간 환경국장직을 수행한 것을 제외하면, 2명이 6개월, 4명은 1년간 국장직을 수행했다.

강 위원장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서장이 되려면 관련한 경력을 최소 2~5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직인 안우진 본부장은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자라면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퇴직.승진 중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업무 경력 2년이나 3년' 이런 기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오는 4월 도정질문에 이 내용을 질의하겠다"면서 "기획조정실장은 이 내용에 대해 도지사와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 도정질문에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이전 의견제시

영향평가 일부 항목, 설문조사 의혹 문제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할 예정인 엘티카지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 제시를 보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3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문광위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시 의견을 보류했으나, 3월 24일 재상정해 논의 했다. 문광위의 이날 결정은 도민 대상 의견조사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고, 경찰이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탁제를 시행하는 의견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브랜드 구축 시급"

코로나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주 관광 뉴딜 과제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브랜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관광뉴딜과제 발굴과 관광브랜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경제 추정치는 -3%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관광객 입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관광수요가 서서히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은 있으나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장단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분야가 관광산업인데, 관광 분야 회생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춘 제주형 뉴딜 과제를 보더라도 관광 분야는 별 고민이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랜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 관광브랜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정부 시책 중복 농업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성 제기

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1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3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경미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농산물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 적용됐고, 올해 감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마늘과 양배추, 콩에 대해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 수입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보장보험은 국비 50%, 가격안정제는 100% 지방비가 투입된다. 가격안정제의 경우 목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농가에게 돌아가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시장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수입보장보험을 우선 적극 도입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제주형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도의 예산절감과 농가 수익 차원에서 어떤 게 이익인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입보장보험과 제주형 가격안정제의 장단점을 우선 파악하고, 제주형 가격안정제 목표 가격 설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 감귤 대부분이 일본 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종보호권에 따른 혼란도 있었다"며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신품종 개발과 국산화는 감귤산업의 필수요소다. 이에 대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농산물의 특성상 수확시기에 맞춘 일시 출하로 가격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산지유통 기반을 통한 출하조절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통해 제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예정지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는 3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제주시 행원리에 위치한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예정지에 방문해 풍력발전지구 동의안 심사에 앞서 현장동향을 파악했다.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는 구좌읍 행원리 산 30번지 일대에 99만 7,947m2 면적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해 21MW(4.2MW급 5기) 규모의 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연간 발전량은 5만 2,751MW/h다.

특히 기존 대규모 풍력발전사업과는 달리 제주에너지공사와 행원리마을회, 발전공기업, 향토기업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인 가칭 "(주)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을 설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즉 부지확보, 이용계획수립,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및 생태계,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보롬왓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마을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탄소없는 섬 실현에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도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주변지역주민과 환경 등 민원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했다.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정책 공정성 확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사진·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3월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사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작년 임용 논란을 기점으로 공정성 확보대책을 철저히 진행해 도민들과 응시자들로부터 신뢰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며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김 교육의원은 "2021년도 표선고등학교 IB 담당 임용시험과 관련해 도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IB담당 1차교사 5배수 뽑고 면접은 70%를 하고 있는데 맞느냐"며 "대한민국 시·도교육청에서 임용에 1.5배수를 뽑고 면접도 50%를 넘지 않는데, 왜 유독 교육청에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격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교육의원은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물 관련해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 임용시험관련 문서들 다 없애버렸나"며,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감사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들어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지적하고 확인서 받으면서 정작 교육청은 스스로 이런 규정을 어기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처리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학생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중단 권고, 실태조사 주문

최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관련해 도내 일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문됐다.

3월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한 중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교장에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의 청소 배정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는 이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해 한 의원은 "자발적인 것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런 지시가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 교무실 청소를 하는게 제가 맞닥뜨렸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면서 "인권 사례가 대단한 게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잡아가야한다고 본다"며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소개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 필요

강성민 의원

코로나19에 대한 즉각 대응을 넘어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안 대응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표발의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환경교육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정례화

문경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계속되는 제주도 체육계 폭력, 학대 등에 유감을 표하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3년마다 체육계 폭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및 위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포츠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 분야 지도자가 초등학생 5명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지도자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안고 공공스포츠클럽에 신청해 연습하던 터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은 무너지고 테니스공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만 남겼다.

지난 2020년 고 최숙현 선수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폭력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 당국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지도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더 피해받은 어린이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지도받으면서 학대받았던 어린이들 전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담당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경운 의원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 개정하면서 도 당국이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적극 행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65세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 예방 시설 지원 규정 마련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일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내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낙상 및 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낙상사고가 많이 나타나며, 또한 집안이라는 심리적 안심 때문에 조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집안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사고가 56.4%(1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박호형 의원은 "보행기 및 낙상 용품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집안 내에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본 발의된 조례안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보행 및 낙상 사고로부터 안전해져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음주, 흡연,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필요

한영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사진·민생당·비례대표**)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39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실행계획에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홍보캠페인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했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영진 의원은, "학생 대상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학년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내용 들을 선별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류, 담배 등 약물 사용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스스로 정하여 학교 규칙이나 규정에 반영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및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전국적 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 자치분권 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각종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현 의원은 "지방의회는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불과해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전국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제주는 국가 자치분권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해 해 온 만큼, 향후 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훈련 인센티브 확대 체육진흥조례 개정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오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은 2019년까지 연간 2,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많은 전지훈련단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 하반기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센티브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제기됐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는 전지훈련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실제 전지훈련 유치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스토브리그 등 행사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 규정 등에 대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관급공사 적정노임단가 적용해야

강민숙 의원 간담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회관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도내 관급공사시 적정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민숙 의원은 "그동안 제주지역은 관급공사 발주시 도서노임할증제 적용이 각각 공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내 공사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에서는 제주지역 도서노임할증제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에서 토목공사와 달리 건축공사는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강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공사시 부서별 상이한 계약기준으로 도서노임할증제 미적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중소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인바 도서노임할증제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지역내 관급공사시 적정 노임 지급을 위한 도서노임할증제 적용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걸쳐 조례안을 발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희 의원, 시각장애인 재활자립 공로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의 법적, 제도적 제약과 사회 인식적 제약을 바로잡고 시각장애인 스스로 재활, 자립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성된 법인단체이다.

오영희 의원은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자립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이런 감사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11대 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해 왔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3월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진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월 임시회에서 발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관련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도민 건강 지원 정책 발굴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록환자가 지난해 말 기준 1만6,543명이고, 매해 신규 등록 환자도 1,200명 이상임을 고려하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고관표 교수(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 박형근 단장(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송민호 원장(제주한의약연구원) 등 의료전문가와 공공보건 의료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❸

트멍
(명사) 틈

<예문>

"추추야, 느 ᄆᆞ음에 담을 톤톤ᄒᆞ게 답지 안ᄒᆞ연 아멩이나 다완 내부난, 거 보라. 그 트멍으로 ᄇᆞ름이 건득건득 뎅김으로 느 그자 매날밤이 들구 젓어뎅겨졈시네. 그 ᄆᆞ음에 담을 톤톤ᄒᆞ게 새로 잘 다왕 뎅겨보라"

"예 성님 알앗수다. 겐디, 성님은 어떵마씀. 트멍이 번찍 읏인 사름덜 멧이나 뒈쿠가"

"아이고 야이도, 느 정체까리가 넘이 읏어붸연 경 골아졌져게"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줏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ᄆᆞ음, ᄆᆞ심 : 마음
담 : 돌담
톤톤ᄒᆞ다 : 단단하다
답다 : 돌 등으로 쌓다
아멩이나, 아뎅이나, 아며나, 아미영이나 : 아무렇게나
다완 : 쌓아서
내부난 : 내버리니까
트멍 : 틈
ᄇᆞ름 : 바람
건득건득ᄒᆞ다 : 바람이 일며 불어오다
뎅김으로 : 다니기 때문에
그자 : 그냥
매날밤 : 매일밤
들구 : 마구
젓어뎅기다 : 여기저기 휘저어 다니다
다왕 : 쌓아서
뎅겨보라 : 다녀와라
겐디 : 그런데
어떵마씀 : 어떻구요(똑 같지요)
번찍 : 전혀, 아무것도 없는 모양
멧이나 : 몇이나
뒈쿠과 : 되겠습니까
야이도 : 이애도
느 : 너
정체까리 : '정체'를 얕잡는 말
넘이 : 너무
읏어붸연 : 없어 보여서
경 : 그렇게
골아졌져 : 말을 하게 되는구나
~게(첨사)

기고

감염병 전문병원이 절실한 이유

강성택 주무관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인류에게 또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감염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1세기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코로나19까지 기후변화와 국가 간 이동의 확대로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확산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며,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효율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36병상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하고,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발표한 정부의 용역보고서에는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설정한 가운데 제주와 인천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과 공중보건 위기 시 해외 동포의 입국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법령에서도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에 호남권역이 이미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입증되어 2020년에 중부권과 영남권, 2021년 경북권역으로 4개 권역 선정이 확정되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타지역 환자 이송이 어렵다. 공항만이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감염병 유입에 취약하다. 미래의 신종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제주만의 방역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 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37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0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19일 공휴일 35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0.(목) ~ 6.1.(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9.14.(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뽑는 '선택'은 매우 어려운 행위 중 하나이다. 선택 대상 중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해야 하며, 좋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이라는 행위는 '선택하지 않는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음'에 의한 것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선택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오죽했으면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라는 말이 유행하겠는가? 선택 자체는 그 선택을 행하는 자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이 귀결되기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또 매우 자주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선택이 이런데, 다수의 선택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결정의 주체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선호하지 않는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거기에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선택과 둘러싼 정보 또한 넘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공공의 결정은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등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각각의 선택을 합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또 다수의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정해 그 권한을 준다. 이는 쉽게 말해 민주적 선거제도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제주의 현실로 치환하면, 공공은 '제주도민'이요, 공식화할 권한을 가진 자는 '제주도지사'요, 공공의 선택은 최종적 '정책 결정'이다. 즉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최종적 정책 결정을 해야 할 당사자이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도민을 대표하여 행사한다. 그렇기에 제주도지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어디로 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리고 도민의 뜻을 모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미명 아래 도민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이뤄졌다. 결국 도민이 어렵게 모아낸 현명한 결정이 왜곡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외면한 제주도지사만 남았다.

물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제주도지사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는 것이다. 도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 도지사의 결단으로 올바르게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뿐이다. 사실 도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을,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서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위안해야 하는 것인가.

정책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라스웰(H. Lasswel)은 그의 저서를 통해 "어떠한 지역개발이든 아무리 그 결과가 바람직스럽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거둬들여야 옳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민의, 즉 도민의 뜻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주의 지금, 이리도 공허하게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김태석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변화의 경고등, 아직도 못보고 계십니까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넘어서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는 빠른 성장을 자랑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의 그림자도 매우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기후악당의 나라라는 불명예이다.

혹자는 2030년까지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면 2050년에 기후변화 위기는 지구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소득 상위 10%가 탄소배출량 52%를 독식하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02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가 53위에 그쳤으며, 이는 OECD국가 중 탄소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이다. 그래서인지 2020년 우리나라의 기후 이상도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겨울부터 평균기온이 높았고, 가장 더운 6월로 폭염일수가 최고였으며, 최장 장마는 54일, 가을태풍이 연달아 몰아쳤다. 이미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다가와 있다. "어쩌다 날씨"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19년 기준으로 10,700kwh라고 한다. 이는 영국의 4,500kwh, 이탈리아 5,000kwh, 독일 6,200kwh에 비해서 두 배 수준이다.(자료:에너테이터)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이 두 배 넘게 급증하였고, 가정과 사업장 모든 곳에서 전기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디든 더 편리하게 더 시원하게 더 따뜻하게 살려는 욕구에 맞춘 생활패턴도 가속화되었고, "안락함"에 익숙해져 버렸다. 과연 다시 우리는 "거꾸로 안 쓰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까?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없는데, 행정과 정치권에서 강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2018년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시작하였다. 툰베리는 기후 위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앞에 놓일 후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생활을 과감히 바꿔야할 때이다. 기후변화의 끝은 지구의 생존능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로 연결되며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인류에게 대면시킬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한민국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생존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강성의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비전에서 문화란?

최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도내 최상위 계획이다. 여기에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제,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걸쳐 기본방향성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전략계획으로서 다양한 핵심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보여주듯이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주 문화 정체성이 밑바탕이 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 용역 중인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 정체성에 대한 밑그림보다 문화예술산업을 가장한 문화시설 확충만 제시되었다.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확장해야 하는 내용은 아직 보여주지 않는다.

10년전 2차 종합계획에서 문화분야는 도민의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교류, 메세나 등을 통한 문화나눔과 확산, 문화생태계를 육성해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경제적 창출효과, 결국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를 나눔으로써 산업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됐다.

지금 3차 종합계획에서 문화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하고, 음악당을 조성한다는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융복합 활동 공간과 공동체 단위 거점 공간 조성에 포커스가 돼있다. 제주관광공사나 JDC가 사업추진 주체가 돼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같은 국제 수준의 음악당을 건립하고, 뉴욕현대미술관 같은 미술관을 제주에 유치하면서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

지금은 문화예술이 IT와 CT가 접목돼 대량 생산과 유통이 되는 기업활동으로서 문화산업이 아니더라도 공연, 예술작품 감상 그 자체가 예술산업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주문화예술의 섬'이란 취지에서는 매우 호의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인 미술관 제주 유치, 국제 수준의 음악당 건립이란 사업들이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육성사업은 아닐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리적 특성에 적응한 사람들의 활동 결과물로 우린 문화적 차별성과 특수성을 말한다. 문화적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재화가 되는 현대에 지역문화를 어떻게 융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도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 지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효과로 산출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양념이라 볼 수 있기에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인 대안들을 도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수정 정책연구위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4·3특별법 전면개정 도민 보고대회 개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가 3월 5일 오전 10시 관덕정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제주4·3유족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도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을 비롯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정연순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등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힘을 모은 민·관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맺힌 응어리를 푸는 단초가 이제야 마련됐다. 4·3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라며, "의회는 보완입법 등 전면 개정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강성민, 김대진, 문경운,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김대진, 문경운, 임정은 의원이 3월 11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 대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입안과 제주도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 자치법규 1,006건, 전수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道 849, 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정책현안 '정책연구' 총서 제4호 발간

제주형 미래 발전 전략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8일 제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연구해 온 성과물을 집대성한 「정책연구」 총서 제4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발간한 「정책연구」 제3호에 이어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경제·산업구조의 개선, 지역사회통합, 문화체육발전 등에 대한 기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관련 41편의 연구자료와 토론회 발표 자료 등을 총합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 총서 제4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좌남수 의장과 도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정책대응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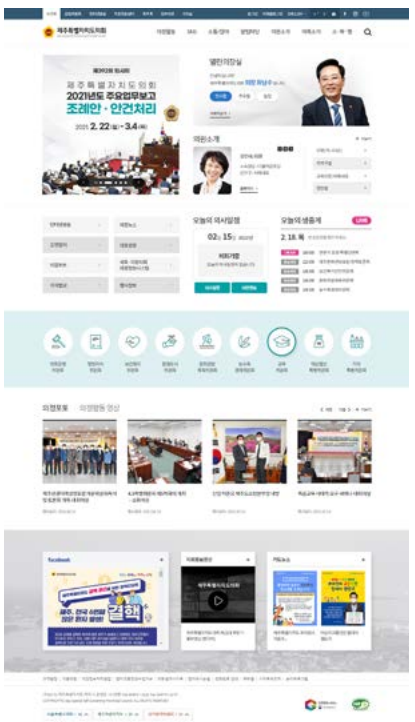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성과 개선 및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존·해양산업 육성,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이슈 등이다.

「정책연구」 총서 제4호는 도민,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배포되어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중앙부처·타 지자체 등과의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도의회 정책연구는 미래세대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 환경보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의회가 효율적인 대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새단장'

사용자 중심 디자인, 메뉴 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을 마무리 짓고 3월 중 선보인다.

개편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큰 메뉴 목록을 표출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레이아웃 재구성으로 열린 의장실 바로가기, 의원검색 및 소개, 오늘의 의사 일정 등이 재배치되어 사용자들이 각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의원들의 의정과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원광장' 코너를 신설했으며, 의원 홈페이지 내에 신규 코너 '현장방문', '카드뉴스' 등의 코너를 개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익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을 향상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